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워크숍 보고서

세션명	오픈데이터와 정보공개, 정부의 투명성과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일시	2017.9.15.(금) 10:45~12:15	장소	세종대학교 광개토태관 소회의실 2
참석자	사회	윤중수(법무법인 광장)	
	발제	오원석(사단법인 코드)	패널
		정진임(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박지환(오픈넷)	김경민(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최형욱(라이프스퀘어/퓨처디자이너스)
플로어	약 20명 참여		

워크숍 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를 통한 투명성과 혁신, 그리고 오픈 데이터의 역할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데이터 기반의 혁신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포함하는 오픈데이터의 중요성을 짚어보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플랫폼으로써 인터넷의 역할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 거버넌스의 투명성과 혁신을 위한 정보공개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한 거버넌스 방안에 대하여 열린 대화 진행 - 열린정부를 위한 OGP(Open Government Project) 현황과 의미 -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실현과 공공, 오픈데이터를 활용한 사회 혁신
-----------	--

1. 데이터를 통한 투명성과 혁신, 그리고 오픈데이터의 역할 (오원석 발제자)

- 오픈 데이터와 공공데이터
- 공공데이터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에게 와야 한다

(1) 공공데이터 활용의 어려움

- 열린 정부 :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공공에서 만든 데이터를 재활용해서 어떤 의미를 데이터로써 보여주는 것
- 디지털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데이터는 자원이고 재료. 즉, 재료와 자원을 가지고 통찰력이나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 그러나 데이터를 가공해서 주는 노력보다는 더 많은 데이터가 개방하는 것이 중요
- 데이터의 중요성 :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많은 곳에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함. 그러나 국내에서 적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할 때 공공데이터 포털보다는 위키피디아나 디비피디아 등 또 다른 오픈데이터 영역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찾는 사람이 더 많다는 현실을 인식해야 함.
-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막상 찾아보면 쓸 만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
- 데이터 개방 :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안 찾아지고 없는 것이 문제.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데이터를 찾다 좌절하는 경우가 발생
- 이로 인해 공공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낮아짐. 반면 데이터가 있지만 별로일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제를 해서 사용할 수 있음. 이는 데이터를 개선해나가면 될 것. 일단은 데이터 개방이 우선시되어야 함

- 데이터가 잘 활용되려면?

1. 활용 가능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알아야 함
2.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함
3. 그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해야 함
4. 그 데이터가 기계적 활용이 유용해야 함
5. 연결을 통해 더 큰 가치를 찾을 수 있어야 함

-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기관은 어떤 데이터가, 어느 서버에, 누구의 관리 하에, 어떤 형태로, 어떤 정책 하에 존재하고 있는 지에 대해 파악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2) 민간영역에서 공공데이터 공개를 위한 노력

- 데이터 목록의 필요성 : 어떤 기관에서 어떤 도메인의 어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지?
- 또한 데이터가 있어도 개방이 불가하다면 보안, 개인정보, 데이터의 저작권 때문인지?
- 시민들에게 정보 수정 및 히스토리 공개해야 함
- 민간에서 시민들이 어떤 데이터를 더 잘 쓸지 추측과 가정을 함. 그러나 누가 어떻게 사용할 지는 시민이 판단해 함
- 공공데이터에 대한 관심, 고민, 애정, 노력이 필요함
- 공공데이터가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참다운 데이터의 재활용이 될 것

2.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정진임 발제자)

- 정부의 정보공개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함이며, 이는 인권으로 보장 받아야 할 중요 가치이다

(1) 정보공개제 제도의 변화

-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안에서 알권리가 포함됨.
- 알권리 : 공공기관, 국가가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정보를 접근할 때 아무런 제약이 없어야 하는 권리
- 헌법재판소에서도 국민이 국가권력에 방해를 받지 않고 의사형성이나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 이에 따라 제도가 생겼으나 우리는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는가?
- 1991년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 이후 시에서 재판, 헌법재판소 판결
-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후, 1998년 시행
- 2006년 인터넷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이트 개설 "열린 정부"
- 2008년 정보공개 정책, 알권리, 투명성 모두 후퇴
- ex) 열린 정부 사이트를 정보공개시스템으로 개편. 정부의 정체성이 드러남
- 2013년 정부 3.0의 국정과제, 정보공개시스템의 개편
- 2017년 문재인 정부 기록물관리법과 정보공개법의 전면 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
- 정보공개제 제도의 변화로 인해 늘어난 정보공개 청구 : 인터넷 사이트 개설 이후 정보공개 청구의 증가

(2) 정보공개 잘 하고 있나?

- 정보공개청구에 맞게 정보공개가 되고 있는가? 아니다
- 1. 정보가 시민의 것이 아니라는 인식
- 2. 시민들이 정보를 알면 사회적 혼란이 온다는 신념 탓에 과정 사이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음
- 최근 행정정보 뿐 아니라 삶과 관련된 정보까지 알려주지 않음

- 하지만 국가는 일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아시아에서 첫 번째, 세계에서 13번째 제정, OECD 데이터개방 지수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위
- 서울시 누드 프로젝트 : 원문정보, 회의정보 공개,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정보공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 전문 인력 배치, 자치구 및 산하기관의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업무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 알권리 관련 조례 재개정 추진
- 정부3.0 :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와, 서비스 정부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투명한 정부부터 제대로 되지 않았음. 데이터 파일형식 문제, 공개율이 증가한 것도 아니었음
- 정보 원문 공개 : 원문 3억 건 공개공약으로 인해 불필요한 정보의 양의 증가(토너구입 증명서 등)
-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
- 문제인 정부의 정보공개, 공공정보 영역 주요 실천 과제. 디테일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관심 있게 지켜 보아야 할 듯

(3)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는?

- 공개하는 정보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정부와 시민간의 신뢰감이 구축되어 있는지?
- 1. 제도개선(알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 정보공개법의 개선(정보공개 전문관 제도를 도입해서 전문가들이 공개정보의 질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함. 공개정보의 원칙을 정해서 일정수준의 합의와 관리 필요)
- 2. 정보공개 영역의 확대 : 공공정부의 생명, 안전, 건강, 교육, 복지 등 5대 국민 관심분야의 정보 공개 확대 및 강화, 정책 제안, 결정, 평가, 과정의 주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 참여 확대(주요 회의 공개 제도 도입, 회의의 기록관리 강화(원전 관련 회의) 등)
- 3. 정보공개 제도 운영의 혁신 : 국민의 편이에 맞춘 공공정보 접근성 개선, 오픈 포맷 기반의 행정정보 생산, 유통, 활용 체계 구축

3. OGP 소개 및 참여형 거버넌스 제언 (박지환 발제자)

- 시민사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정부에 어떻게 제안하고 참여형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는 지에 대해 회의

(1)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

- 정부 간 협의체, 열린 정부를 만들기 위해 각국이 어떤 식으로 노력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오바마 대통령 주도로 시작됨. 이후 각국에서 열린 정부 선언
- 시민사회와 같이 열린 정부를 만들기 위한 컨설팅 후 2년마다 공약을 발표하고 실행, IRM이라는 별도의 리서처를 통해 열린 정부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참여했는지 평가
- 2010년 초반부터 참여, 올해 행안부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OGP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운영위원으로 지원해서 선발되었음
- 최근 지속가능 발전목표와 같이 연관되었고 SDG 16 의제에 오픈 거버넌트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OGP는 SDG와 함께 국제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
- OGP가 참여형 거버넌스의 마중물이 됐으면 함.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참가하는 포럼에서 열린 정부의 정책을 같이 만들어나가고 집행하는 것이 목표
- OGP의 추구 : 책임성, 참여성, 투명성 : 다수의 참가자가 하나의 포럼을 통해서 참여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를 통해서 실현이 가능
- IRM 리서처 : OGP에서의 독립적인 평가 기관, 2년마다 공약 실행 여부 평가 -> 시민사회의 참여가 부족했기 때문에 평가가 좋지 않았음
- 그 후 시민사회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음, 서울시도 지방 자치정부로 참여(Wego-전자정부협의체) 해서 OGP 협력

(2) OGP를 통한 거버넌스 구조 개선 제언

- 공공정부의 적극적 공개, 공공데이터의 개방 등의 세부적인 목표를 OGP를 통해 실현하겠다는 공약
- OGP 운영위원국으로서의 정부의 역할과 예산을 참여형 거버넌스 이행의 동력으로 활용 가능
-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정보공개 강화 및 공공데이터 질적 향상을 통한 투명한 정부 구축
- 기본적으로 시민사회나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공무원들이 경청하는 자세가 부족함
- 자주 얼굴을 맞대고 말을 주고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4. 패널 토론

- 정부의 혁신, 투명한 정부, 신뢰성 있는 정부 -> 이것을 인터넷을 이용해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1) 정부의 정보공개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 (전지은 패널)

- 국제회의에 가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상황이 굉장히 어드밴스 되어 보임
- 그러나 정부가 제공하는 인터넷이나 프로그램 등의 인프라에 대한 시민들의 사용률에 비해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
- ex) 필리핀, 아프리카의 경우 다수가 이메일과 엑셀을 사용하는 법을 모름
- 외교부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아무도 궁금해 하지 않는데 왜 궁금해 하는지 물어보는 편. 수상하게 여김
- 이것이 당연한 시민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사이에 만연한 생각임. 그래서 누군가는 이것을 이끌어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 다양한 나라들이 최근 극비 문서 같은 경우에도 더 공개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 국제적으로 원조 정보를 공개하려는 OGP같은 파트너십, 국제 규범에 따라 한국도 공개하고 있음
- 그런 규범이 있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이것이 정부를 게으르게 만드는 경향이 존재. 그러한 규범에 맞게만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
- 이러한 자기 합리화가 정부 투명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기준이 아닌가? 그렇다면 투명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으로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방향으로 가야함
- 시민들이 정보공개에 대해 어떻게 관심을 갖고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을까? 다양한 참여 독려 예시가 존재
- ex) 마인크래프트 : 마을을 만드는 게임. 아프리카의 도시, 마을을 시민들이 참여해서 자기 마을을 꾸미는 프로젝트. 거버넌스에서 사각지대인 10대를 위해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
- ex) 스쿨 프로그램 : 공립 학교에 등록하려는 어린아이가 있는 부모가 더 좋은 학교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 ex) 푸드 포 아메리카 : 학부모가 나에게 필요한 정보라는 것을 인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음
- 시민의 입장에서 거버넌스에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이나, 학교에서 장려해야 함

(2) 기술을 통한 시민의 사회참여 (최형욱 패널)

- 기술을 통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사회를 물려줄 수 있을까?
- 세월호 참사 : 당시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음
- 세월호가 가라앉을 때까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을까? 수많은 하인리히 법칙의 전조가 보였으나 아무도 공유할 수 없었음
- 노티 : 우리 주변의 위험한 요소들을 직접 찍어서 스마트폰으로 공유 가능. 그게 어떻게 조치가 되고 해결됐는지? 그 과정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
- 하지만 서비스를 진행한 지 1년이 지나도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음. 서비스도 물론 부족했지만 시민들이

본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니 참여를 많이 하지 않음

- 경주 지진: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활성판에 원전이 건설된 나라가 우리나라, 일본밖에 없음
- 만약 원전이 금이 가서 방사능이 유출되면 우리가 과연 막을 수 있을까?
- 세이프 케스트: 일본은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수치를 일반 시민에게 전혀 공개를 하지 않음. 시민단체에서 아두이노 이용해서 직접 방사능 수치를 웹사이트에 공개함.
- 세이프 케스트를 한국에 초대해서 경주, 포항에서 시험 운영할 경우, 만에 하나라도 우리나라에서 방사능이 유출된다면 정부가 공개할 것인가?
- 거버넌스에서 정보공개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 따라서 시민들의 노력과 연대가 중요. 앞으로 수많은 디바이스가 개발됐을 때,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측정해서 어떻게 공개를 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함

(3) 오픈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과 예측 (김경민 패널)

- 오픈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분석 결과가 나온다면 새로운 산업의 탄생이 가능
- 하지만 국토부, 행자부가 공개된 데이터를 이어주는 커먼 변수가 필요한데, 그것이 부족하여, 연구자가 직접 다 정제해야하는 문제가 있음. 다른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를 고려해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함
- 서울시 범죄지표: 오픈데이터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공개를 하지 않음. 모든 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데이터를 겨우 얻었음.
- 하지만 경찰서에서 저널의 분석결과 심사를 거부함. 어떤 특정지역에서 낙인효과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 때문
-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범죄율이 높은 곳의 노력으로 오히려 범죄율이 낮아짐. 오픈데이터로 인한 부정적인 가능성도 있지만, 사회를 바꾸는 긍정적인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함. 따라서 오픈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분석결과와 공개도 중요.
- 사상의 자유: 오픈데이터 뿐 아니라 분석결과가 오픈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중요
- ex) 1990~2009년 모든 학생들의 수능 데이터를 확보하여 분석결과, 교육의 지역 간 격차가 매우 명확하게 나타났음.
- 금천구와 강남구에서 영어 같은 경우, 격차가 굉장히 확대되어 드러남. 교육부 역시 사교육 시장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음
- 이처럼 굉장히 소중한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되지 않고 자본을 갖춘 시장에서만 공유하고 있는 은밀한 데이터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수준과 원칙을 세우고 굉장히 컨피덴셜한 부분의 경우 특정 그룹만이라도 공개가 되어야 함

(4) 마무리 (윤종수 사회자)

- 지금의 현황, 정부에서 정보공개가 왜 안 되는지, 글로벌 차원에서 정부는 투명한 사회를 위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였음
- 아직까지는 정부의 노력 부족으로 오히려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함
- 현재까지 데이터의 공개, 투명성에 대한 정부의 두려움, 또한 시민들의 두려움, 무관심이 있으며, 서로간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편. 이러한 허들이 낮아지지 않으면 수많은 혁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장애가 있을 것
- 앞으로 두려움을 갖는 쪽에서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정부쪽에서도 어떠한 명분을 주는 것이 필요
- 거버넌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 즉 혁신을 위해 정부 및 시민사회 모두 플러스가 된다는 인식 개선이 필요. 다만 지금은 경험이 부족한 것 같음

질의

(플로어)

- 강력범죄 통계 사례를 듣고 얼마 전, 서울의 가임기 여성 지도가 떠올랐다. 당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런 것 같은 경우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경우가 아닌가? 정보공개는 꼭 긍정적인 면만 있을까? 부정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 또 다른 예로, 사업을 하면서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공공데이터 포털 사이트에서 정보를 열람 할 때, 정보의 질이 너무 낮았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보를 얻는데 막막한 점이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를 무작정 요구하기에는 고충이 있다.

(박지환)

- 거버넌스를 어떻게 시민사회와 정부가 협력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오픈 거버넌스, 협치 등의 많은 사업들을 통합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너무 서울에서만 이러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전국적인 논의가 되기 위한 방안을 앞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정진임)

- 어떤 정보가 제일 먼저 공개되어야 할까? 데이터는 당장 공개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메타데이터는 먼저 공개되어야 한다. 메타데이터를 통해 어떤 정보가 분석되었는지 그 목록만 공개가 된다면 필요한 사람들이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취급되고 있는 정보의 공개만 있어도 정부에 대한 신뢰와 정보를 못 찾을 경우의 허탈감과 좌절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오원석)

- 공개하지 않아야 하는 데이터는 공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 공개가 되지 않는지 알려줘야 한다. 또한 시민의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한다. 같이 협치가 되면 좋겠지만,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의 수가 적다.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적다.

(윤종수) 앞으로의 과제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1. 분산되어 있는 움직임이 합쳐지면 좋겠다.
 2. 메타데이터의 공개, 목록의 공개부터 시작해야 한다.
 3. 시민들의 속도,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 논의의 3가지 과제의 지속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구성과 참여가 필요하다.
 - ODF : 한 곳에 모여 멀티 스테이크 홀더의 참여, 정부쪽의 정보공개 정책에 관여하기 위해 만들어짐, 포럼의 구성원들과 적극적인 분들을 모집 중이다. 시민들의 참여부터 시작해야 한다.
 - OGP : 시민단체끼리의 참여로 인해 같은 방향으로 서로간의 힘을 합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 같다. 올해 OGP 이사회국으로 선정되었으며 그곳에 모인 각각의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힘을 모여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 공공데이터 전략 위원회 법적위원회 새로운 기수 3기 출범으로 이전과 다른 활동으로서 데이터 목록공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 같다.
- 각각 단체에서 하는 활동 모두 시민의 역량강화가 목적. 하나하나의 활동이 반복됨으로써 시민의 역량강화가 가능할 것이다.